

악취·흙탕 수돗물·교통... 빛가람혁신도시 3대 현안 해결 부심

나주시, 호혜원 11만여마리 가축 내달 10일까지 협의보상 착수 LH 등 시행사 53km 상수도관 세척...정상 급수 후 원인 파악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늘리고 광주~혁신도시 직통노선 개설

‘악취, 흙탕 수돗물, 교통 불편’ 주요기관 이전 완료 3개월을 맞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3대 생활 불편 현안이다.

31일까지 산학연클러스터, 전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공원 등의 준공을 앞두고 빛가람혁신도시 내 거주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신속한 수습과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등이 뒷받침되는 문제들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1박2일로 나주에서 열린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에서도 이들 3대 현안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30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탁수 수돗물’과 관련된 LH 등 시행사들이 부담해 31일까지 53km에 이르는 상수도관을 모두 세척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전남도, 나주시, 시행사, 수자원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탁수사고 대책반은 흙탕물이 수압 변화로 상수도관 내 누적된 침전물과 섞이면서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피해가 큰 만큼 정상 급수 후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혜원 악취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다음달 10일까지 토지를 제외하고 11만 여마리의 소·돼지·닭

등 가축, 축사, 저장물 등의 감정평가를 마치고 주민과 협의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호혜원에서는 소 400마리, 돼지 2만3000마리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악취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나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50억원, 30억원 등 모두 80억원으로 호혜원 축산농가 폐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가축, 관련 시설물만을 보상 대상으로 한데다 가축 등의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나주시 관계자는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일단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후에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직원, 거주주민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 증설, 광주~혁신도시 직통노선 개설 등 교통 불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KPS로의 진입로, 횡단보도 설치 등도 언급됐다.

한편 LH,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시행사는 31일 ‘탁수 수돗물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나주시로의 인계인수를 위해 나주시와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윤재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하다” “윤시장과 몇 번 만났을 뿐...특별한 인연 없다”

광주시의회 첫 인사청문회...윤재만 DJ센터 사장 후보 검증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나 반쪽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2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에 대한 자격 검증 위한 공청회 이후 시의회가 주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공청회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패널로 나서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월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사·공단 등 주요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윤재만 내정자(전 한국무역협회 상임감사)의 소견 발표에 이어 9명 위원들의 질문과 내정자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특위는 이정현 위원장과 임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보현·박춘수·심철의·유정심·이은방·전진숙·조세철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협약에 따라 김호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진강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인사특위 전문가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윤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함께

제재 어렵고 자료 한계 노출

도입 취지 못미쳐 ‘반쪽 성과’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컨벤션센터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식견 등을 따졌다.

김보현 의원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질문에 시설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는 등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춘수 의원 역시 “모든 답변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지 않다”면서 “직무수행 계획서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은방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는 사장 내정 이전의 업무계획서와 별차이가 없다”면서 “전시컨벤션시설 관리업체인 (주)이노바스 대표 역시 시설관리 분야에 치중해 있다”라고 질타했다.

일부 위원들은 윤 내정자의 주소지 잦은 변경 등이 부동산 투기 아닌지 따지기도 했다. 윤 내정자는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

남본부장 재임시 당시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였던 윤장현 시장을 몇 번 만났을 뿐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답변했다.

경영방침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속하게 파악한 뒤 보고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는 의원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자료확보의 한계,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제재 예로 등까지 겹쳐 애초 도입한 취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산하기관 혁신과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윤 내정자에 대해 인사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뒤 시에 보낼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청문보고서를 참고해 윤 시장 임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는 지난 1984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뒤 광주전남지부장, 상임감사, 무역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특별위원, 여수 EXPO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임기는 오는 2018년 4월까지 3년이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는 다음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재정 확충하고 자치법 개정해야”

지방 4대협의체 ‘지방자치 20주년 평가와 개선 방향’ 토론회

우리나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근본적 자세 변화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협의체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근본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4대협의체 대표들은 30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증가하는 사회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장도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

정시 지방자치 보장과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훈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이 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지방자치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자치 성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법 개정은 꼭 이뤄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간담회 후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합동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 방향을 놓고 지방행정, 재정, 의정 분야에 걸쳐 토론을 했다.

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후 4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지방자치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 등에 대해 국회의장과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3년 혁신 30년 성장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사회, 우리 아들 딸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없는 사회, 우리 청년들이 더욱 일할 맛 나지 않을까요?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 제2의 인생 시작!
 능력 있는 커리어맘, 든든한 엄마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노사정 대타협!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립니다. 노사정 대타협!